

투데이 칼럼

바이든 교체론 대두

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후보자 첫 TV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후보자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우려되는 대목도 많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첫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공개한 광고가 눈길을 끈다.

트럼프 선거 캠프 광고는 "바이든은 계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자전거에서도 쓰러지고, 재킷도 제대로 못 입고 길을 잘 잃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짜깁기 영상이라며 맞받았지만, 고령 문제에 대한 우려는 TV토론으로 또다시 증폭됐다. 권 목소리에 어눌하게 말을 더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 같아요."라고 꼬집었다. 기침을 하거나, 멍하게 허공을 보는 모습도 더러 노출했다. 그 결과, 첫 TV 토론 이후 실시간 CNN 여론 조사에선 응답자 4명 중 3명이 민주당 후보를 교체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양자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정복규
논설위원

43%, 트럼프 전 대통령 49%로 약 6%p 차이가 났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 믿지 않았다면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단일 후보로 확정된 현직 대통령을 다른 후보로 교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여론의 향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고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만에 하나 민주당 측 후보가 교체될 경우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감축 등을 카드로 내세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가 봤다. 그런 제안과 요구, 그리고 500%

1,000% 인상하라고 하는 요구 등 방위비 분담 요구는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아주 확연하게 예상을 할 수 있다.

방위비 협상에 나선 한미 양국이 4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남은 4개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반드시 본인의 정치적인 업적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는 발생해선 안 되는 일이고 연합훈련 중단도 발생해선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방위비를 갖고 한국이 협상 레버리지, 바깥형 카드(협상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트럼프 재선 시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한미일 안보 협력 역시 유지,

강화할 때도 돈 얘기를 할 것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은 처음 하는 일이다. 한미 훈련, 미일 훈련 따로 하다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최초로 하고 있다. 그것마다 다 돈을 내라고 청구서를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불러올 나비효과 중에는 한국의 핵 무장론 논란도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지난달 26일 기고에서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빅터 차의 시나리오는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미국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외교 정책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외도 굉장한 강력한 외교 정책 권한을 갖고 있다.

적어도 비토(거부) 권한은 갖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들은 내부에 바이든 팀과 트럼프 팀을 각각 꾸려야 할 것이다. 양측의 선거 캠페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외교 정책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독자재언

지문사전등록, 실종예방의 첫걸음

무더운 여름과 함께 찾아온 반가운 여름 휴가철! 여름을 맞이하여 가족이나 친구 등 여름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즐거운 휴가철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 휴가를 제대로 즐기 못하는 순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휴가철과 같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아동실종사건이 증가해 경찰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경찰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안전드림 사이트 또는 앱(APP)에서 지문과 사진, 및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안전드림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여 등록하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히 지문 사전 등록 및 수정을 할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

하기 때문에 1년마다 사진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실종이동찾기센터, 신고상담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고, 미리 지문·사진·보호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해놓으면 대상자가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실종신고 없이도 경찰에서 빠르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시는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반면, 등록 시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이 평균 1시간 이내로 단축이 될 수 있다.

최근에도 가까운 지구대에 치매 환자 가족이 찾아와 사전지문 등록을 하고 간사태가 많이 있으며 경찰서에서도 관내 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지문을 사전 등록하여 실종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선아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중국 꺼져!"



지난 12일(현지시간)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WPS)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하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8주년을 맞아 반중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시위대는 매년 7월 12일을 '서필리핀해의 날'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설

최저임금 줄다리기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줄다리기가 펼쳐졌다.

2025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전 최저임금 수정안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1,330원의 큰 차이를 보였다.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1천 2백 원을, 경영계는 9천 870원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1만 2천 6백 원을 주장했던 노동계는 1천 4백 원을 내리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적어도 13.5%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9% 인상에 그쳤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입니다."라고 했다.

9천 860원인 현재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10원 인상안을 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 2배를 넘었고..."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지난 6월 27일을 넘겼지만, 10차 회의에서도 양측이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정안에서 노사 간 1천 330원의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제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88년 도입됐지만, 노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단 7번에 불과하다.

협의의 스타팅 포인트(시작점)가 너무 멀어서 정부가 협상의 시작점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

로켓 배송 40대 사망

쿠광 '로켓배송' 기사로 일하던 40대 남성이 지난 5월 집에서 쓰러져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월, 4남매의 아빠 41세 정 씨가 집에서 쓰러져 숨졌다. 쿠광 '로켓배송' 일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이었다.

정 씨는 주 6일, 심야, 새벽 배송을 했다. 저녁 8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캠프와 배송지를 3차례 오가는 '3회 건 배송'이 업무였다.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인 '심실세동·심근경색 의증'이다.

사인에 대한 논란과 함께, 죽음의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과 쿠광 사이엔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간접 고용이라는 택배 기사들의 특수 고용 형태 때문이다.

쿠광의 자회사인 쿠광모지스틱스서비스(CIS)는 택배 대리점들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일종의 하청으로, 이 대리점의 택배 기사들이 쿠광의 배송 업무를 하게 된다.

'쿠광 킥플렉스'는 쿠광이 직고용한 택배 기사인 '쿠광 친구'와는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된다.

정 씨 역시 1톤 화물차를 보유하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쿠광 킥플렉스'로 일했다.

쿠광 측은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전문배송업체, 즉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에 소속된 개인사업자니, 원청인 쿠광CIS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유족의 생각은 다르다. 정 씨가 쿠광CIS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았고, 정 씨 죽음에는 원청인 쿠광CIS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쿠광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 90곳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속 직원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 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매일